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李善鍾 議員外 6人
2. 件 名 :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3. 案件要旨 : 別添參照
4. 檢討意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年 10月

大田直轄市議會運營委員會
專門委員 韓 義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4. 10.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本 改正條例案은 1994年 9月 28日 李善鍾 議員外 6人으로부터 提出되어 1994年 9月 29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1. 提 案 理 由

地方自治法('94.3.16 法律 第4741號) 및 地方自治法施行令('94.7.6 大統領令 第14317號)이 改正됨에 따라 法令에 符合되게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를 整備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가. 行政事務監査및 調査를 本會議에서도 직접 行할 수 있도록 함 (案 第2條 第1項, 第3條 第3項)

나. 行政事務監査期間을 現行 “5日 以內”에서 “10日 以內”로 延長함 (案 第2條 第2項)

다.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에 小委員會나 班을 構成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條의 2)

라.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中에서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을 除外시키고 地方公企業法 제79조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市가 4분의 1이상 出資 또는 出捐한 法人을 追加시킴 (案 第5條 第1項)

마. 監査對象事務에 國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정하지 않은 國家事務를 포함시킴 (案 第6條 第1項)

바. 證言・陳述과 關聯된 對象者중 事務에 關係되는 一般人을 包含시킴 (案 第9條)

아. 證人의 宣誓方式과 證人保護에 관한 事項을 具體적으로 정함 (案 第9條의 3, 第9條의 4)

자. 出席・證言을 要求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拒否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7條)

3. 檢討意見

○ 本 案件은 上位法令인 地方自治法과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一部改正됨에 따라 이에 符合되도록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 主要内容은

- 첫째로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지금까지는 常任委員會나 特別委員會에서만 施行하고 있었으나, 이를 本會議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하고 小委員會나 班을 構成하여 運營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事案에 따라 伸縮性있게 對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둘째로 行政事務監査 期間을 現行 5日에서 10日로 延長함으로써 監査를 내실있게 遂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셋째로 監査 및 調査 對象中에 市가 1/4이상 出資 또는 出捐法人을 追加시키고, 國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정하지 않은 國家事務도 포함시키므로 監査對象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 넷째로 證言・陳述과 關聯한 對象者中 事務에 關係되는 一般人也 包含시키고 出席・證言을 要求받은 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拒否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며, 虛僞로 證言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섯째로 證人에게 證言을 要求할 때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였으며
- 끝으로 證人・參考人이 비공개를 要求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一部 또는 全部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議會에서 證言・陳述한 證人・參考人이 그 寫本을 要求한 때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 交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證人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地方議會에서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施行함에 있어 法規上의 根據가 없어, 議會에서 出席・證言 그리고 陳述要求를 拒否

하거나 虛僞로 證言을 하여도 制裁措置를 취할 수 없었으며 地方議會의 監査權 및 調査權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本 條例改正案을 통하여 늦게나마 監査期間이 延長되고
監査對象이 擴大될 뿐만 아니라 罰則 制定됨에 따라 本格的인 地方

自治時代를 맞이하여 地域住民의 代表機關인 地方議會가 名實相符
한 監査權 및 調査權이 確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本 條例案의 上位法規인 地方自治法과 地方自治法施行令等を 면
밀히 檢討해 본 결과 별다른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判斷됩니다.